

제 30 회 한일 · 일한포럼 공동성명

2022년 8월 26일 동경

제 30 회 한일포럼은 2022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민간 차원에서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양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 11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그 다음 달 서울에서 제 1 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후 한일관계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올해 제 30 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숫자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었다. 되돌아보면 냉전이 종결된 1990 년대의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 등의 발생으로 흔들리면서도 양국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 의해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21 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10월)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그 후 한일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구조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정부는 능동적 대응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국민감정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한일이 함께 글로벌 과제와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질서 안정에 그다지 공헌하지 못하였다.

본 포럼의 참석자들은 오랜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는 안전보장 면에서 운명공동체이고, 국제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한일관계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양국의 신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의사를 밝힌 것을 좋은 기회로 여기며, 민간의 입장과 관점에서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1. 국내정치와 양국관계

2021년 10월 일본에서는 기시다 정권, 2022년 5월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이웃”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양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국내적 대응을 하고 있다. 기시다 정권도 한국 측의 대응에 대해 환영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국민정서와 정치상황이 여전히 복잡해서 관계개선은 예단하기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양 정상은 국민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열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나아가 조속히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정상간 셔틀외교를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한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2. 새로운 지정학적 과제와 한일협력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환경이 연동되며, 한일 양국은 글로벌한 국제환경 하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NATO 정상회의(6월 29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협력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힘을 키워가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감을 더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더욱이, 한일은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한편 조속히 한일간 전략대화채널을 재개하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적인 운용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

3. 한일 경제관계와 경제안보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의 안보 갈등이 심화되는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한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중국과의 안정적인 상호 의존 관계 유지에 고심하는 한편, '중국 시장의 힘'을 무기로 한 중국에 대해, 공급망 재구축으로 시작되는 경제안보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경쟁관계이지만, 다시 돌아보면 다국적 틀 아래에서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 다자협력을 시야에 넣은 한일 양자협약, 예를 들어 경제 각료에 의한 '2+2'의 제도화가 요망된다.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형해화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2019년 7월)」의 재검토는 합리적인 선택지이다.

4. 한일현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한일양국은 국제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협력할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은 역사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갈등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기점으로 거기서부터 과거사 문제를 되돌아보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양국간 화해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정신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한일 신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과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존중이며, 양국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정치적 리더의 결단에 있고, 전략적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에 있다. 또한,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와 일본 수산물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데이터를 반영한 대처가 중요하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본 포럼에서도 거듭 강조해 온 차세대의 역할이다. 올해 제 8 회를 맞는 『한일주니어포럼』에서도 한일관계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참가자 의식'이 강조되어 '발상의 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시야에 두고 청소년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본 포럼 참석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관계가 갖는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연대감을 더욱 키워가고, 양국 관계를 뒷받침해 나가자는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바이다.

한일·일한포럼 참가자를 대표하여

한국측 의장	일본측 의장
유명환	오코노기 마사오